

학교용지부담금 세입편성 허술

도의회 이상현 의원, 건교국 내년도 본예산 심사서 "5년 연속 15억원 편성에 실제 세입금 3배 이상 많아"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 1·사진)이 지난 24일 열린 건교국 2018년 본예산 심사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허술한 세입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상현 의원에 따르면 매년 100세대이상 단독주택건축용 토지분양이나 공동주택 분양자



에게 법정비율로 받게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본예산 세입에 5년 연속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세입된 결산액은 최근 4년 평균 50억에 이르는 등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5억원에 대한 세입추계근거 역시 실제 분양실적과 차이가 많으며 도의 행정편의주의적 영터러 예산편성을 질타했다. 실제로 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5억원의 세입을 편성했으나, 세입결산액

즉 연간 실제세입액을 보면 2014년에 75억 7,900만원, 2015년 40억7,500만원, 2016년 46억6,100만원, 2017년 45억으로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60억에서 25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적적이 주목적인 기금도 아니고 학교용지확보나 학교건축경비로 교육청에 전달되어야 하는 예산인데 세입금액부터 큰 착오가 생기면 지출계획 역시 즉흥적이고 계획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착공통계 등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80%라도 근사치의 추계를 통해 실제 세입금액과의 오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본 익산 원도심의 미래는?

이춘석 의원, 공청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사진)은 지난 24일 익산시립모현도서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본 익산 원도심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의 최종 선정을 열흘 앞두고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익산 시민들의 뜨거운 열의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그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책임자인 국토부의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직접 발제를 나서기로 하면서 개최되기도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연계사업을 총괄하는 책임 공무원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가 5년간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사업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연계사업 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용자, 주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에선 현재 익산뿐만 아니라 정읍, 군산, 전주 네 군데가 등 사업공모에 제안을 했으며, 각기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줄곧 익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익산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 왔는데, 드디어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밝히며, "오늘 공청회가 나후부터 원도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익산이 도시재생사업에 최종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농업보조금, 인접 시군경작자도 지원해야"

도의회 양성빈 의원 "농민 혜택 누리도록 하는 일... 도, 정부에 건의를"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사진)은 농업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양성빈 의원은 "국비 지원사업 중 농업보조사업의 경우 쌀 직불금만이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속해있는 시군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자체만 주체가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시군의 지방비확보여부에 따라 여건에 맞게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



서는 인접 시군 경작자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인접지역에 국비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진안, 장수, 임실, 순창 4곳에 불과하고, 무주, 부안의 경우 소모성 자체비만 인접시군 경작자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 자체사업의 경우 순창군만이 인접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소모성 자체비만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

군이 인접지역 경작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인접지역 경작자의 경우 한 군데서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농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인 만큼 정라복도는 정부를 상대로 인접지역 경작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도 보조금 조례를 정해 시군간 차별받는 농민이 없도록 지원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시군마다 인접지역 경작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건의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의원 발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생활지원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무형문화재 이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 무형문화재법 상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이다. 이중 이수자를 제외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전수교육을 받는 전수장학생에게도 장학금 등이 지급된다.

그런데 실제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현행법상 전승자인데도 경제적 지원 없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고, 그나마도 예산이 부족해 전체 이수자 6,090명 중 490명(8%)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이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경직을 하거나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전승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수자들이 생계 문제로 전승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후 세월호 유가족과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있다. 이날 사회적 참사법은 재석 21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6인, 기권 8인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세월호 참사·가슴기 살균제 진상규명 '길 열렸다'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 안전인 사회적 참사법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결돼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사회적 참사법은 가슴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골자다. 특히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왔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19대 대선 이후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을 당초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6명에서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수정했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2+1년을 요구했지만 야당에 양보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법정안정성을 고려해 1기 특조위, 가슴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단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월호와 가슴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에겐 장갑을 건네는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주미에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게 대해 "사회적 참사법 발의자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1기 특조위 조사에서 (바근해 정부가) 방해로 심하게 해서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여기저기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서 드러내는 역할을 2기 특조위가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다들 고생이 많았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뉴스